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65
----------	-------

발의연월일 : 2025. 6. 5.

발 의 자 : 장경태 · 김용민 · 전현희
문정복 · 조계원 · 황운하
김승원 · 김동아 · 민형배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신분 불안정으로 우수인력 유치와 업무 연속성·전문성 축적을 방해하는 등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확대하고 공수처가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

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근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군검사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나. 검찰총장,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별도의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수사기관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등).
- 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국민투표·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범죄의 범위에 고위공직자·수사기관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라. 공수처 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한정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마.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및 직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제4항).

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사.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제기 요구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되 공수처 검사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및 안 제2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교육감”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하. 판사

러. 군판사 및 군검사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사기관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가. 검찰총장

나. 검사

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죄를”을 “죄(미수범으로 처벌하

는 경우 및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359조의 죄”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아목) 중 “마목”을 “마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으로 한다.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죄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의 죄

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카. 「국민투표법」 제99조의 죄

타.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의 죄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란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죄”를 “죄 및 수사기관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고위공직자”를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죄”를 “죄 및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

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을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 수사”로, “고위공직자범죄와”를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해당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호와”를 “제3호, 제3호의2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을 “정년”으로 한다.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제4항 중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을 “검찰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다음 각 호의 협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
2.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협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요청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으로, “즉시”를 “7일 이내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사처검사 및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을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으로, “사건”을 “7일 이내에 사건”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의 연장 협의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제기 요구 시점, 같은 법 제205조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 때”를 “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검사”를 “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다.

④ 수사처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수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수사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27조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관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등 이외의 관련”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파견공무원 등) ①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파견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금되었던 자로서 무죄재판을 받거나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대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법무부장관”은 “처장”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1. ----- ----- -----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u>검찰총장</u>	<삭 제>
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u>교육감</u>	타. ----- ----- ----- <u>교육감,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
파. <u>판사 및 검사</u>	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u>회의 의장 및 시 · 군 · 자치구의회의 의장</u>
하. <u>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u>	하. <u>판사</u>
거. ~ 더. (생 략)	거. ~ 더. (현행과 같음)
<신 설>	리. <u>군판사 및 군검사</u>
<신 설>	1의2. “수사기관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

	<u>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u> <u>가. 검찰총장</u> <u>나. 검사</u> <u>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u>
2. (생략)	2. (헌행과 같음)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죄</u> 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3. ----- ----- ----- ----- <u>죄(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및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 -----.</u>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u>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가. ----- ----- <u>죄</u>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u>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u>	나. ----- ----- ----- ----- ----- ----- <u>제359조의 죄</u>

<p><u>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다. ~ 사.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아. 가목부터 <u>마목</u>까지의 죄 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 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 3조 및 제4조의 죄</p> <p><u><신설></u></p>	<p>다. ~ 사. (현행과 같음)</p> <p>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u>제22조의 죄</u></p> <p>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u>제27조의 죄</u></p> <p>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제4조의 죄</u></p> <p>카. 「국민투표법」 <u>제99조의 죄</u></p> <p>타. 「공직선거법」 <u>제230조 부터 제235조까지의 죄</u></p> <p>파. ----- <u>마목</u>까지 및 아 <u>목</u>부터 <u>타목</u>----- ----- ----- ----- ----- -----</p> <p>3의2. “<u>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 죄</u>”란 <u>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u></p>
--	--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4. -----

-----.

가. -----

----- 죄 및 수사기관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

나.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
----- 죄 및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51조제1항---

라.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 수

<p><u>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u></p> <p>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u>제3호와 제4호의 죄</u>를 말한다.</p> <p>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2. 제2조제1호다목, <u>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u></p> <p>②·③ (생략)</p> <p>제8조(수사처검사) ①·② (생략)</p> <p>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3회에 한정하여 연임</u></p>	<p><u>사</u> ----- <u>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u> -----</p> <p>----- <u>해당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가 범한 죄</u></p> <p>5. ----- <u>제3호, 제3호의2 및</u> -----.</p> <p>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u>-----</p> <p>----- <u>고위공직자범죄등</u>-----</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사처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연임할 수 있으며</u>---</p>
---	---

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생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생략)

<신설>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 ③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

-----.

<삭제>

2. 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

--. <단서 삭제>

③ ----- 정년-----

-----.

제12조(보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② (생략)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④ -----
-- 검찰직공무원-----
-----.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무총리-----

-----.

④ -----

다음 각 호의 협조-----

-----.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

<p><신 설></p>	
<p><신 설></p>	<p>2.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협조</p>
	<p>⑤ 제4항에 따라 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요청을 거 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 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처장에게 회신하 여야 한다.</p>
<p>⑤ · ⑥ (생 략)</p>	<p>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p>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 처검사는 <u>고위공직자범죄</u>의 혐 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p>	<p>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 ----- <u>고위공직자범죄등</u>----- ----- ----- -----.</p>
<p>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다른 수사기관이 <u>범죄를 수 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 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u>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 다.</p>	<p>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고위공직 자범죄등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 -- 7일 이내에 ----- --.</u></p>
<p>③ · ④ (생 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5조(<u>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u>)</p>	<p>제25조(<u>수사처검사 및 수사기관고</u>)</p>

에 대한 수사) ① (생략)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 -----
--- 7일 이내에 사건-----
-----.

제25조의2(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의 연장 협의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 제기 요구 시점, 같은 법 제205조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

----- 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
 --- 고위공직자범죄등-----

 --- 고위공직자범죄등 이외의 관련 -----.

제44조(파견공무원 등) ①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파견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

<p>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생략)</p> <p><u><신 설></u></p>	<p><u>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u></p> <p>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이 법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금되었던 자로서 무죄재판을 받거나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대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법무부장관”은 “처장”으로 본다.</u></p>
---	---